

광주 광산구 '이주외국인' 정책 전국서 주목

지난해 등록 외국인 2만2,859명
10년새 3.4배 ↑ ...광주 전체 55%
40만 유지 한축...인구해법 모델

전국 지자체들이 인구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광주 광산구의 이주외국인 정책이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29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도농 복합도시인 광산구는 지난 10여년간 이주외국인에 힘입어 인구 40만선을 유지했다.
광주 전체 인구 감소세가 지속하는 동안 광산

구의 주민등록 인구수는 2010년 말 40만53명, 작년 말에는 40만654명으로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이 기간 광산구의 등록 외국인은 6,968명에서 2만2,859명으로 3.4배 증가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전체 외국인 주민의 55%가 광산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놓고 보면 광산구는 전국에서 21번째로 외국인 주민이 많은 기초자치단체이기도 하다.
체류 유형은 이주노동 36%, 유학 22%, 결혼 이민 14% 등이다.
출신 국가는 총 65개국으로 집계됐다. 중국 18.6%, 베트남 18.4%, 우즈베키스탄 13.4%,

태국 11.3%, 러시아 8%, 카자흐스탄 6.9%, 캄보디아와 필리핀 각 4.9%, 기타 17.9% 등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고 매우 다양하다.
평동·소촌·하남·진곡 등 다수 산업단지가 있고, 전체 면적의 약 절반이 농촌인 광산구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월곡동을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이 형성됐다.
강제이주와 유랑의 애환을 지닌 중앙아시아 동포가 모여 사는 광주 고려인마을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광산구는 외국인 주민이 단순히 인구 수만 늘린 게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산과 소비의 한축을 담당히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노동력이 없으면 산업현장이 멈춰서

고, 농사조차 못 지을 만큼 우리 사회의 의존도 또한 커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인구소멸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는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의 탐방이 이어지고 있다.
인구 3만~4만선인 군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법무부 공식 통계로 4,715명(자체 추산 7,000명)인 광주 고려인마을을 각자의 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주거, 일자리 지원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으로 인한 강력범죄 증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광산구는 오해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광산구가 경찰 등 치안 당국에 문의한 결과 이주외국인과 내국인 간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는 범죄통계는 없다.
일부 집단의 난투극 등으로 외국인 밀집 거주지가 무법지대라는 편견이 생겨났는데, 우리 사회 법질서 체계에 적응 못한 외국인이 경찰 등 당국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체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하면서 빚어진 예외적 사례라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먼저 이주한 외국인의 재능기부 등이 선순환을 이루면서 기초질서 지키기 등 사회 적응력이 높아져 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김양수 광산구 외국인주민과장은 "이주 외국인인 데는 '보이지 않는 시민'이 아닌, 인적자원 뿐만 아니라 문화자산이기도 하다"며 "교육, 의료, 복지 등 행정 기능도 변화상을 따라가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봉 기자



서구 정책소풍 데이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서구 정책소풍 데이'에서 김이강 서구청장, 시민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의사부족 심각...정수 확대 국민 요구”

정의당, 공공의대 설립 촉구

정의당 전남도당과 강은미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정수 확대와 지역 공공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의사가 적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하루 4명 이상이 사망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지역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3.7명이나 한국은 2.5명(한 의사 제외 시 2명)으로 최하위권”이라며 “의사 정수 확대는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의대 정원은 18년째 동결돼있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의사단체와 밀실 협상으로만 논의하고 있어 전향적인 확대 방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정부가 일부 단체의 기득권에 막혀 국민 건강을 방치하는 현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각계각층의 요구가 반영되는 사회적 협의회를 구성해 의사 부족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지방의료원 운영이나 정부에 국립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스스로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역 의사를 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근산 기자

김승남 “무단 방치 폐농기계 관리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촌에 무단으로 방치된 폐농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기준 국내에는 경운기, 트랙터 등 주요 농업기계 12종 총 192만792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농가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농기계는 1만 4,272대에 달했다. 폐농기계는 농촌이나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돼 농기계에서 흘러나온 녹물과 폐

유 등으로 인해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농촌의 미관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월 소유자가 농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등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폐농기계를 강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김대원 기자

외국 주민 넘치는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 추진

광주시 등 공청회 의견수렴
경쟁력 강화...7월 중 선정

광주에서 외국인 주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광산구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광주시·광산구·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6일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광주시 등은 이날 제시된 주민, 학부모, 각급 학교 등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부에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다.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교육국제화특구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학교 외에 특수목적고와 이에 의한 공립학교를 자율로 지정할 수 있다.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외국어 전용 지구, 국제교류시설 등 교육 국제화 기반 시설도 구축할 수 있다.
3기 특구 지정 신청은 이달 말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7월 중 선정 결과가 나온다. /길용현 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광산구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62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6만원(4인 기준/월) 이내 지원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0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2억 4,1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실직·폐업, 중한 질병·부상,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갑자기 곤란해졌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